



부록
서기보고서
토론요약문
참가자 프로필

서기보고서 네트워킹,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

아마레스와르 갈라 교수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소장

저명한 전문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현장연구에서 축적한 다양한 정보들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보니 기록업무를 맡은 서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자리를 빌려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보며 든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이미 주최 측에서 제공한 발표문을 요약하는 대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시종일관 문화는 평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 왔다. 그에 따르면 문화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존엄성의 원천이자 공유해야 할 지식과 힘의 근원'이다. 이러한 '정체성 및 존엄성의 원천'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란 문화 간, 세대 간, 기관 간, 그리고 학문 간 대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우선,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의 탄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네스코, 센터, 한국 정부, 그리고 아태지역의 모든 협약 당사국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센터는 역내 네트워킹 및 역량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센터의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과 조정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해 기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 및 일본센터의 사무총장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1세기에 들어 네트워킹은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국가, 국제 관계를 경제, 사회, 문화 및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등

장했다. 물리적 또는 문화적으로 국경의 초월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호존중과 문화상호적 이해가 바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개회사에서 센터 운영의 핵심 목표는 소통과 정보공유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략 및 실행계획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포된 센터 문서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담당관은 센터가 협약을 근간으로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돈희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문화 간 그리고 종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고찰했다.

오늘 회의의 발표와 토론은 센터의 소지역 차원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이카와 노리코 교수를 비롯한 일부 발표자들은 아태지역 내 협약 당사국,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주체들의 참여에 있어 소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과반수 이상이 동북아 지역의 유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문화권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이란에 설립된 센터를 뺀 나머지 카테고리 2기구들이 동북아시아 3개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20여 년 전 중앙아시아에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덕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반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센터는 이미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역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확고한 언어 및 문화적 역사기반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 대양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태평양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각 도서 국가들은 대양 횡단 항해(Voka Mona)에 뿌리를 둔 풍부하고 역동적인 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산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협약과 같은 경성법이든 선언문, 헌장, 권고문, 윤리강령 등의 연성법이든 관계없이, 국제 유산법 가입국 현황을 보면 소지역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센터가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를 위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무형문화유산 협약 당사국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참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아태지역의 언어 및 문화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토론에서 언어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비이

원성(non-duality)이 주요 관심사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협약들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이푸가오족의 터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후드후드 성가는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하여 공동체 무형문화유산으로 보호 받고 있는 반면, 동 민족의 계단식 벼 경작지(Rice Terrace)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2007년 채택된 유엔 원주민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푸가오족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세계유산협약에 모두 가입한 소수 원주민 공동체로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규모가 큰 아태지역 원주민 공동체들과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목록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지역별 연구사례 및 과제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에 있어 목록작성은 필수적이다. 협약은 목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목록작성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이다. 다음은 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제시한 것이다.

- 유산의 지정과 정의(11(b)조)
- 목록작성(12, 15조)
- 인식 제고(14, 15조)
- 역량 구축(14, 15조)
- 보호, 관리(15조)
- 등재신청(운영지침 1, 2, 7 조)
- 국제원조 요청(운영지침 12조)
- 정기보고(운영지침 157, 160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록작성의 주체이다. 공동체 기반의 목록작성을 장려하여 보호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편, 복수 국가 등재신청의 경우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복수 국가 등재신청을 장려하면서 공동체 기반 목록작성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태평양지역은 공동체 기반 목록작업과 관련하여 훌륭한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다.

바누아투의 현장 연구원 네트워크는 공동체 중심의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유자와 전승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다.¹ 목록은 각 공동체 고유 언어로 작성되었다. 바누아투 모델은 태평양지역, 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유자 및 전승자, 단체,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여 현지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에게 계획 수립 및 이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역 공동체에게 권한을 우선 부여함으로써, 공동체 스스로가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공동체의 실행역량을 강화하여 좀 더 효과적인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공동체 역량 구축 프로젝트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권한 부여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지역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바를 정확히 인지한다고 인정한다.
- 가치와 우선순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 지역민들의 접근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 지역 공동체에게 자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 지역 공동체의 관리 기술을 향상시킨다.

임돈희 교수는 기초연설에서 협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 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목록작성 및 보호 계획은 해당 공동체에서 외부 이해당사자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히만유 싱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소장은 “그 어떤 문화도 배타성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필자는 “무언가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에 다름 아니다.”라는 또 다른 간디의 명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구호와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포괄적인 실천, 목록화 사례연구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네트

1_ Ralph Regenvanu and Kapila Vatsyayan - A Dialogue, 아마레스와르 갈라(ed.), 남아시아 전통지식체계, 박물관, 무형 및 '자연'유산 국제 워크숍 회의록, 하이데라바드, 2008년 2월 3~7일.

워킹 및 정보공유를 통해 극복될 것이다. 이는 오늘 회의에서 주목을 끌었던 전문가 부족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오늘 제기된 여러 기회들에 주목해주시기를 바란다.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 넘는 시도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술 전문가들과 기술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회과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 가능성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²

사회기술의 구조와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별도로 어떻게 기술을 통해 인간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세대 간 전승, 변형, 창의성, 혁신, 접근, 형평성,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이라는 가치의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적 이익과 공동체적 이익은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대치되는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지난 40여 년 간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가정, 직장 및 공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를 통한 세계관,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 쇼핑, 은행업무, 이동, 통신 등을 막론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드웨어는 기술력 대비 점차 그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에서는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이러한 기술의 작용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통신시스템 및 응용언어학이라는 학문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네틱스, 정보학, 시스템학 및 분산 네트워크 이론을 발전시켜 응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술이 가져온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 지능 시스템 또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가 가져오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초창기 정보통신기술은 힘, 지식 및 문화를 집중시켰다. 이들 기술은 인쇄기, 통신소, 교통 및 유통 시스템 등 대기업 또는 국가만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공장과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들 기술은 집중화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

2. '디지털 기술의 사회 생태론'은 2005년 12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기술, 지식, 사회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의 중심 주제로 연구사례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다(<http://t06.cgpublisher.com/welcome.html>). 이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직후 학술대회 의장으로서 필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되었으며, 경제력과 정치력 그리고 상류 문화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기술은 무료이거나 저렴하고, 순간적이면서 세계적이다. 이들 기술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의미 생산 및 전파 수단을 개방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기술은 전자 민주주의, 참여 디자인, 실행 공동체의 바탕이 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수많은 문화, 이해관계 및 지식 공동체를 번창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며 더 비판적인 전망도 있다. 디지털 기술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불평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한다거나, 디지털 기술에 현혹된 우리는 수동적 인간이 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e-러닝’이 학교, 대학, 직장, 가정에서는 물론, 나아가 평생 동안의 학습 경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교육의 최우선 관심사는 기술이다. 학생들이 컴퓨터로 네트워크화된 직장세계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참여 및 시민의식 함양의 측면에서도 기술은 핵심적인 교육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 영역에서 배제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 약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승방식,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 공동체는 기존 지식을 전승받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지식은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역동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연구원이 강의식으로 진행하던 전통적인 교실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콘텐츠 관리’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그룹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지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방 학습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지식경제’ 또는 ‘지식사회’라고 불리는 단계에 진입했다. 정보통신기술과 이 기술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상향식 지식 체계는 학습센터, 직장, 학교 및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협회 등 지식을 전승·창조·생성하는 공동체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구축된다.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단체의 지식을 공유하여 공동의 지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지식의 수용자였던 개인, 단체, 공동체는 지식의 생산자 내지

발행자가 되어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흐름을 일부분이나마 뒤바꾸어 놓음으로써 새로운 '대화형 지식 체계'로 변화시킨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를 다루는 거시적 분석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기술 적용과 관련된 세부 사례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킹과 관련하여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협력과 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정보공유는 지금까지 축적된 집단적 노력들을 존중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은 원활한 쌍방향 소통 수단으로 협약 이행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우리는 디지털 영역의 역할을 충분히 연구하여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고, 디지털 기술,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연대 의식을 갖고 오늘 하루 끝까지 함께 한 참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